

최근 도서 폐기 사태와 관련한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의 입장 표명

진행 순서

1. 최근 도서 폐기 사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발표
 - 김신영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장)
 - 백승종 (역사가, 전 서강대 교수)
 -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
2. 성명서 발표

2025. 9. 23.(화) 16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강의실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시대착오적인 도서 폐기 압력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입장문

김신영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장)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왔다.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검열 행위이며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최근 도서관에 소장된 ‘리박스쿨’추천 도서의 일괄 폐기 압력과 관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심히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도서관계의 입장을 대표하여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도서관은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를 선정·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념적, 사상적, 종교적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여과해 왔다.

둘째, 도서관은 헌법(제10조, 제21조제1항, 제37조제1항 등)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 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양육자, 사서와 사서교사, 그리고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셋째, 편향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역사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도서관 수서 과정에서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다면 정확한 조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이다. 다만, 해당 도서의 폐기 혹은 배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정기구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및 폐기를 결정할 사안이지 절차를 무시한 채 일괄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 압력에 해당한다.

넷째, 도서 폐기 압력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와해시키고 도서 검열을 통해 도서관의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또한 사서직의 자료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이다. 도서관과 사서직은 어떤 형태의 외압이나 검열, 일괄 폐기, 이용 제한도 단호히 거부한다.

다섯째, 2024년 8월 발행된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적법한 기구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민원 발생 시에 재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고 있다. 앞으로 도서관은 시스템화된 자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에 전국 22,694개 도서관(국립도서관 4개, 공공도서관 1,296개, 작은도서관 6,830개, 대학도서관 456개, 학교도서관 11,842개, 전문도서관 495개, 교도소도서관 54개, 병영도서관 1,686개, 장애인도서관 31개)과 10만 전문직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전문직 단체와 도서관계는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다.

2025. 09. 19.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금서의 역사에서 배운다

백승종

(역사가, 전 서강대 교수)

1. '리박스쿨'의 문제

'리박스쿨'이란 명칭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존재였던 이승만(이=Rhee)과 박정희(박=Park)의 성씨를 딴 것이다. 이 단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임했으나, 실제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자는 주장을 일삼았다. 요컨대 극히 보수적 관점에서 현대사 교육에 매달린 것이다.

이 단체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데, 리박스쿨은 서울 한 도시에서만도 10여 개의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맡았다. 윤석열 정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리박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정치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다. 대선 때 특정한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 단체는 서울교육대학교와도 협약을 맺어, 공교육 영역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리박스쿨이 청소년에게 편향적 정치 교육을 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교육 내용은 물론 다양해야 하겠지만 편향된 내용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필자 역시 리박스쿨의 교육활동을 비판하는 바이다.

하지만 리박스쿨의 교재라든가 또는 그들이 추천한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몇몇 도서를 금서처럼 취급한다면 되겠는가. 이를 필자는 단호히 반대한다. 누구나 특정 도서를 지지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또 그와 반대로 비판할 자유도 있다. 그런데 만약 차원을 달리해 특정 도서를 금서로 정해 독자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면, 이는 출판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2. 역사상의 수많은 금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무거웠다.

<<금서, 시대를 읽다>>(산처럼, 2012)라는 책에서 필자는, 금서란 “시대와의 불화를 알리는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라고 정의하였다. 금서를 통해 한 시대의 일탈과 혐오, 저주와 선동, 좌절과 소망의 문화 공간이 열릴 때가 많았다. 지난날 권력자들은 금서에서 음란과 퇴폐, 사상적 불온의 징후를 읽어냈고, 그들 도서를 제거와 격리의 대상으로 삼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이전에는 금서 조치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그 이유도 천차만별이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요한 볼프강 폰 괴테)은 자살을 조장했다고 금지했고, <<보바리 부인>>(귀스타프 플로베르)은 불륜을 미화했다며 탄압했다. <<사회계약론>>(장 자크 루소)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금했으며, <<정감록>>(미상)은 조선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었다. 또, <<태백산맥>>(조정래)은 빨치산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이유로 금서 취급을 하였다. 어이없게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은 제목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데다 저자 이름이 막스라서 금서로 취급되기도 했다. 참으로 실소를 자아내는 일이었다.

금서가 탄압받은 과정을 살펴보면, 한쪽에는 새로운 사상과 관점을 주장하는 저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들을 억압하는 지배 세력 또는 기득권층이 있었다. 양자간에 문화적 충돌이 심하게 일어날 때마다 금서 조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책을 사이에 두고 문화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 전선이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 시대가 직면한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책일수록 금서로 내몰릴 가능성이 컸다. 권력자들은 해당 서적이 인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탄압했으나,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불과했다.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해관계 때문에 그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때가 빈번하였다. 지금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판물을 검열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구에서 정치 권력이 검열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것은 16세기였다. 금속활자의 등장으로 인쇄술이 발달하고 어느 때보다 출판이 활발해지자 교황청이 앞장서 검열을 체계화했다. 1501년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모든 책은 출판에 앞서 교황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단 종교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1546년에 열린 트리엔트공의회는 교황의 이름 아래 최초로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을 작성했다. 초기의 금서는 천동설을 부정하거나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책들,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도서가 대종을 이루었다. 이후 <금서목록>은 시일이 흐를수록 두꺼워져, 유럽의 손꼽히는 지식인은 대부분이 금서의 저자가 되고 말았다. 케플러, 갈릴레이, 몽테뉴, 단테, 브루노, 데카르트, 흄, 로크에 이어, 스피노자, 볼테르, 디드로, 장 자크 루소, 칸트도 금서를 썼다며 죄악시했다. 나중에는 세계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근대 유럽의 대표작도 상당수가 금서도 지정되어, 빅토르 위고, 장 폴 사르트르, 앙드레 지드 등의 저작도 한때는 <금서목록>에 등재되었다.

교황청의 <금서목록>은 300차례나 수정 증보되었으나, 1966년 6월 14일에 이르러 전면 폐기되었다. ‘제2바티칸 공의회’(1959~1965)의 결정에 따른 변화였다.

돌이켜보면, 금서의 저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들이 일으킨 문화투쟁(Kulturkampf)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진보를 가져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때로 지배 권력은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지만,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그 한계를 노출하기 마련이었다. 때가 되면 역사의 주인공은 바뀌기 마련인데, 그러한 시대의 전환을 앞당긴 것이 곧 금서의 저자들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인 중요한 동력 또한 금서를 둘러싼 문화투쟁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성찰할 지점이 있다. 역사상 금서 조치가 되풀이될 때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권력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해치는 도서를 금서로 지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하였으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차단하기란 불가능하였다.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것이 역사의 힘이다. 그 힘을 무시하고 공연히 금서 논쟁을 일으켜 탄압을 일삼으면 인적, 물적 희생만 발생할 뿐이었다. 이는 금서의 역사에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3. 민주시민의 ‘숙의’가 필요

지난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은 장하준 교수의 저서 등을 국방부 금서로 지정한 적이 있었다. 보수 정권이 자본주의에 관한 성찰을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보수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교육 및 아동 인권교육에 관한 몇몇 추천 도서를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추방하였다. 그때도 사회적 반발이 적지 않았고, 금지 효과도 거의 없었다.

오늘날 이재명 정부는 지난날 윤석열 정권의 비호 아래 성장한 리박스쿨의 사상적 교과서를 금서로 지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식자층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지난 역사를 보아도 그런 일은 불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한다. 만약에 해당 도서의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내용을 차분히 검토하고, 시민들과 더불어 충분히 토론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숙의(熟議)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관점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당 서적의 옳고 그름을 깊이 있게 논의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은 자명하다. 좋은 책이라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요, 그게 아니라면 곧 잊히고 말 것이다.

독자의 권리 침해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위축시킨다

-금서와 금기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깊이 읽고 나눌 수 있기를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

1. 독자의 권리 침해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빼앗고 공동체 발전을 저해한다

독서, 책읽기의 중요성과 강조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역사 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해왔다.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하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독서운동을 하고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책 읽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책읽기의 중요성으로 내세우는 것도 근본은 한결같다. 책읽기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 보다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오랜 역사를 관통하는 동안 성찰을 통해, 인류가 모든 생명과 자연에 의존하고 협력하는 존재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과 창의성이라는 진실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익숙한 대로 고정된 삶이 아닌 무한히 변화하는 새로운 세계와 환경에 대처하며, 서로 협력할 방법을 발견해낸 것이야말로 인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읽는 즐거움에 가장 벅찬 순간은 감동과 경탄이 일어날 때이다.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정보를 만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타자성을 발견하는 것,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면 서 어떤 낯선 상황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진다. 낯설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그동안 경험하고 알게 된 지식을 끌어내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상상력이고, 그 가능성을 새롭게 유추하고 실현해내는 것이 창의성이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경험과 지식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주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특정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어떤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책 읽기를 통해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얻기 힘들다. 책읽기가 감동이나 경탄으로 뿌듯하고 충만해지는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스스로 몰입하고 발견하고 뭔가 배우게 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독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책읽기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면서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책시민단체가 모토로 하고 있는 평등한 책읽기, 자유로운 책읽기, 꿈꾸는 책읽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독서 환경과 문화에 해당하는 평등한 책읽기는 누구나 어디서나 책과 만나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고, 독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책읽기는 자신의 경험과 취향, 가치관 등으로 인물의 행동과 말, 상황을 해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책읽기이고, 독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꿈꾸

는 책읽기는 책 속에서 타자를 만나 이해하고 타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낯설게 보고 성찰하면서 성장하고,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하고 희망을 만드는 책읽기다. 독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책읽기, 독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책읽기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좋은 책이 아니라 좋아하는 책이 있다’ ‘내가 읽을 책은 내가 고른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독서의 달에 실시하고 있는 금서읽기주간 모토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읽을 권리가 있다” 역시 독자의 권리를 강조한 말이다. 독서 관련 단체들과 기관들이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를 만들어 금서읽기주간을 실시하는 것은 ‘도서를 검열하고, 도서관의 자유를 억압하고, 출판문화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한 저항이고, 독서 도서관 출판의 자유를 확대해나가고자 함이다. 독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책읽기가 개인의 성장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2. 도서 폐기 외압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실현하는 도서관의 가치를 훼손한다

“정치적 잣대로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는 도서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대사의 비극이자 독재의 상징인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는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초중고 계기교육 도서로 추천한 책을 폐기하라는 교육당국의 계획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 제목이다. 몇몇 교육청이 관련 도서 폐기 및 열람 제한을 지시한 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금서읽기주간을 실시하고 있는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를 위시한 시민사회는 당연히 도서 폐기 반대에 동조한다. 도서관에 도서를 폐기하라는 외압은 금서를 만드는 일이고, 도서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며 지식과 정보의 광장이며, 도서관인은 지적자유와 자유 수호의 전사이다. 도서관인의 윤리선언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자유와 정보 접근을 막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도서관 장서 폐기를 지시하는 것은 이러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서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다. 독자들이 자신의 호기심과 알 권리를 누리고 두려움없이 타자를 만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을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인의 권한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독자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관심과 취향을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이나 제공에서 고려해야 한다.

자료수집과 제공에 있어서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아동문학연구자인 루딘 심스 비숍(Rudibe Sims Bishop)이 1990년에 <교실을 위한 책 선택 및 사용하기>에 발표한 에세이 <거울, 창문 그리고 미닫이 유리문 (Mirrors Windows and Sliding Glass

Doors)>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책이란 읽는 이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독자가 상상의 힘으로 저자가 만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이책의 제작자들은 누구에게나 어울릴만한 거울과 창문이 될 수 있는 책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하고, 도서관 사서들과 교육자들은 어린이들도 쉽게 열고 다른 세계로 오갈 수 있는 유리문으로 어린이책이 작동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2024년 어린이책의 해 심포지엄 ‘어린이책이 더 다양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참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지속적으로 기성세대의 익숙한 가치관에 맞지 않는 특정 책을 금서로 만들고 검열하는 세력들이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여 원하는 학교도서관에 지원한 책 134종 중 7종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여, 사실상 금서조치를 한 것이다. 그 이후로도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평등·성교육 관련 어린이책을 전국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열람 제한하거나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 ‘우리 아이 페미니즘에서 살아남게 하기’ ‘동성애·성평등에서 살아남게 하기’ 등 플랭카드와 홍보물을 만들어 도서관 앞에 세우고, 도서관을 협박하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와 성과 관련한 책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치워야 한다고 압박하는 지자체 장과 교육감에 의해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이 제한되기도 했다. 지난해 2024년에는 경기도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경기도내 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2천 500여권이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에 ‘유해한 성교육 도서 유의 안내’와 ‘성교육 도서관리 현황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여러차례 보내 성평등·성교육 관련 도서의 처리를 압박한 결과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장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권한을 침해하고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가치를 훼손했다. 학생 독자가 자신의 궁금함과 호기심으로 다양한 삶의 가치를 담은 책과 만날 기회도 차단했다. 학생이 다양한 책을 만나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역량을 키울 기회도, 도서관에서 환대받을 기회도 막아버렸다. 학생들은 환대받으며 온몸에 활기가 가득할 때 책을 만나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어떤 일에 관심 갖고 함께 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책을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책에서 자신의 궁금함과 알 권리를 충족한 경험, 도서관에서 내 취향과 관심사가 환대받는 경험이 크게 작용한다. 도서관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도서 폐기 외압은 도서관의 가치를 실현할 수도, 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도 없다.

3. 금서가 아니라 함께 읽기, 학교도서관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운다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 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며, 아이들이 이 나라와 세계 속의 지성인으로 성장해가는 핵심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첨단과학기술 시대의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종이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는 독서는 건너뛸수 없는 성장과정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예술 감수성,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길러,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을 길러야 합니다.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서적을 읽은 아이가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2025. 9. 15.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중에서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하며, 독서의 중요성, 학교도서관이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우 중요한 언급이며,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전문인력인 사서교사 배치를 서두르는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학교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 사서교사가 도서관 운영위원들과 논의하여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공하는지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독서교육이 시작된다. 교육청이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는 역사단체 리박스쿨이 추천하는 책이라고 해서 폐기하고 금서로 만들 일이 아니다. 역사왜곡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몇몇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에서 해당 책을 폐기하거나 열람 제한 조치를 지시했다. 어떤 사회든 통제와 억압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다양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대화와 타협, 조율, 조정 등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문화는 사라지게 된다. 도서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을 민주주의자로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교육청과 정부기관이 옳고 그름을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할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역사왜곡 및 명예훼손이나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논란이 있다는 증거 등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역할이고, 교육적 행위이다. 특정 집단을 경계를 두어 통제하는 사회는 구성원들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이는 머지않아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검열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자들이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

리박스쿨의 성명서에서 제기했듯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특정 부분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구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허위 사실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밟아 법적 판단이 나온 경우는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도서관에

서 폐기와 대출 규제를 하라고 외부 기관에서 압박하는 것은 도서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도서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헌법에도 명시된 내용과 다른 주장이나 가치관을 담은 책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저항하고 논란이 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운영위원들과 큐레이션을 통해 다양하게 장서를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펼쳐보고 싶은 시기를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이나 이슈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한다.

둘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거나 미화된 책은 도서관에 있는 장서 중에서 다른 관점으로 그려진 책 혹은 다른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책을 같이 전시하여 작가들이 책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 비교하여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작가의 가치관이 담긴 책을 독자의 취향과 가치관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넷째, 책 속의 타자를 통해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이끌 수 있다.

다섯째, 내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여섯째, 학생들이 토론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역사왜곡이나 혐오와 배제의 가치를 조장하는 책을 알리고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로 시끄럽고 논쟁하고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자로서 의사를 표현하고 경청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점점 나온 생각들, 새로운 가치를 상상하고 실현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리박스쿨 성명서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는 생명을 복돋우고 살리는 것보다 기득권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다수를 학살한 제노사이드를 정당화하는 부분이 버젓이 드러나 있다. 이런 낯선 가치관에 대해 내 생각을 견주어 보고, 그런 가치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이야기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독서교육으로 이어지고, 깊이 읽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험하는 장으로, 어떤 인물과 상황에 나는 어떤 해석을 하는지, 낯설고 색다른 가치관을 가진 생각의 맥락을 짚어가며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생각의 흐름과 내 생각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런 가치관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런 가치관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깊이 읽기를 하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

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전인교육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주목한다면, 독서교육을 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민주주의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독서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4. 금서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만나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책임 있는 사회가 되기를

리박스쿨의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외압에 의한 도서 폐기, 즉, 금서를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매년 독서의 달에 금서읽기주간을 실시하는 것은 금서로 지정한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함으로서 금서를 지정하는 권력을 무력화하고, 독자로서 읽을 권리와 읽지 않을 권리를 누리기 위함이다. 민주주의자로서 권리이다. 특정 책에 대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명예훼손 등 법적 결정에 의한 조치가 아닌, 권력과 외압에 의해 금서를 지정하고 검열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이고, 도서관법과 출판문화진흥법 등에 보장된 도서관인, 출판인,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금서를 만들고 검열을 내면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 함께 독자의 권리, 민주주의자의 권리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이념이나 사상에 의한 통제 욕구, 어린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의한 통제 욕구 등으로 금서를 만들고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주의자로서 역량을 발휘해나갈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무력화하여 통제하고 계몽하려는 독재자에 동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무엇보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경계를 두어, 더욱 보호해야 할 어려움에 처한 생명들을 짓밟고 배제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금서를 만드는 세력을 감시하자.

우리가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고 독자의 권리를 지키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생명들을 보좌하고 돌보며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쉽게 배제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섬세하게 살피고 공감하면서 함께 협력할 기예를 발휘하기 위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느리고 깊게 생각하는 책임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본다.

성명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외압을 멈춰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우리는 의사표현을 통해 인간 존엄을 실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에서는 ‘독서의 달’ 첫 번째 주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 ‘금서읽기주간’(Banned Books Week)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현의 자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지키자는 취지로 매년 진행한다.

최근 편향된 역사교육을 해온 ‘리박스쿨’ 관련 도서에 대한 폐기 요구가 거세다. 전국에서 해당 도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교육청은 소속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폐기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도서가 편향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서 납품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단체가 공교육 현장의 역사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려 했는지, 도서관 수서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장서는 상위기관이나 외압에 의해 폐기할 수 없다. 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다양한 지식과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적 공간이다. 특정 도서를 배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하며,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 도서관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우리는 이미 몇 해 전, 교육부가 나다움어린이책 사업에서 성평등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책들을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철수시킨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일부 단체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앞의 사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특정 집단의 압력과 편견에 따라 책을 없애는 행위는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검열 행위다.

도서관 자료 선정은 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사서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이나 사회적 논란이 수서와 장서 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도서관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고, 더 이상 지식 정보를 수집

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일 수 없다.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와 리박스쿨 도서 폐기 논란은 모두 도서관 수서의 독립성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다.

우리 사회는 군사독재 시대에 가혹한 도서검열을 경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는 아직도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가 될 자료를 애초에 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기검열을 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기검열 문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도서관 장서의 다양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침해로 이어지며,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민주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도서관이 특정 집단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적 공간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도서관의 자유와 수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사서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서관 장서에 대한 외압을 즉각 중단하라.
2. 도서관 수서와 장서 관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3. 도서관 자료에 대한 논란은 폐기가 아니라 비판적 토론과 주석, 보완 자료 제공을 통해 해결하라.
4. 도서관이 다양한 삶의 가치와 이념을 만나 스스로 비판력을 키워갈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보장하라.
5. 학교도서관이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를 100% 배치하라.

2025. 9. 23.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사서협회